고객과 함께하는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제1761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11월 30일 (음력 10월 10일) 목요일

대한민국 VIP NO.1 결혼정보 닥스클럽 062-228-3222

모처럼 환한 웃음 29일 무안공항 관제탑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박준영 전남지사로부터 무안공항 건설 과정과 지리적 이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J프로젝트 땅문제 해결"

盧대통령 무안 방문…'저리장기 임대' 언급

기업도시 30~50년간 토지·세제 등 혜택

29일 무안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조성사업(J프로젝트)의 최대 난제인 해남·영암 일대 간척지 양도·양수문제와 투자환경 개선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대형여객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토록 하고 이를 위한 부지 매입비 400억원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권 개발구상의 구체 사업들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목포와 대불공단을 연결하는 삼학대교 조기착공에 대해 관계 부처가 적극 검토하고, 목포 신항만도 당초계획인 12선석 규모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도 지시했다.

이날 무안국제공항 현장방문과 목포대 누리사업(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무안 승달문화회관에서 가진 지역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기업도시) 토지이용에 있어서 낮은 가격에 장기임차를 해준다든지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과감하게 혜택을 주려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간척지 문제와 관련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에서 타당성을 제시하면 이양, 임대 등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간척지 3천만여평의 양도·양수 문제로 초기 난항을 겪고 있는 J프로젝트 부지 확보에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노대통령이 약속한 서남권 개발

① J프로젝트 부지(간척지)확보 지원
② 기업도시 투자기업에 획기적 혜택
③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비 지원
④ 목포~대불산단 삼학대교 조기 완공
⑤ 목포 신항만 12선석 규모 유지

노 대통령은 또 "국내외 기업의 초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시적으로 토지이용이나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 한시적 기간이 30~50년 동안 이뤄지도록 제도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신안·목포·무안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의 태동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따라오도록 하겠다.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장기발전 전략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삼석 무안 군수가 앞으로 무안공항을 화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활주로 확장 부지 매입비 4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하자 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삼학대교 조기 착공과 목포 신항만을 당초 규모인 22선석으로 개발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목포대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44개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누리사업(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성과보고회에서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부시, 종전협정 서명 용의

"김정일과 만나 한국전 종료선언 하겠다"

지난 18일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서 언급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폐기시 상응하는 조치로 "한국전의 공식 종료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실은 알려졌지만 부시 대통령이 당시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서명 용의까지 밝혔다는 점은 처음 알려진 것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전 종료선언 문제가 거론됐고, 서명 문제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논의하며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언급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끝났다고 한국 및 북한 양측과 함께 만나서 서명을 할 용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한국전 종료 선언을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 위원장을 카운트파트로 인정해줄 수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전 종료 선언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서명 용의는 스노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 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약속한 조치를 실천으로 이행하기 위해 갖겠다고 밝힌 "평화 세레모니(ceromony)"중의 하나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악의 축' 국가에 포함시켰고, 김 위원장을 '폭군'으로까지 표현한 점에 비춰볼 때 한국전 종료선언 서명 용의를 밝힌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미국의 '체제변화'(regime change) 시도 의구심을 불식시키겠다는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부시 대통령은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new economic incentive)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 反FTA 시위 폭력 없었다

광주에서 29일 열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났다.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 시위 때와는 달리, 각목·돌멩이는 물론 가벼운 몸싸움도 없는 평화시위였다.

'한미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는 29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5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시·도민궐기대회'를 갖고 ▲한미FTA협상 중단▲노무현 정권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오후 6시까지 문예공연·촛불행사 등을 한 뒤 쓰레기를 치우고 자진 해산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소속 노동자 1천여 명도 이날 오후 1시30분 북구 임동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진 뒤, 일부만 개별적으로 FTA반대시위에 참가해 경찰과 충돌하지 않았다.

'광주·전남 FTA반대 시위'가 이처럼 평화적으로 치러지기까지는 '폭력시위는 절대 하지 말라'는 시민여론과 경찰의 유연한 대응이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YMCA·YWCA와 광주지역 6개 종단(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이 참가한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이날 오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시국 기도회를 갖고 "22일 1차 시·도민궐기대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후유증은 한미FTA 논의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평화시위를 주문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회원 40여 명도 집회 현장 인근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를 촉구했다.

집회를 불허했던 전남 경찰도 1천500여 명을 배치했으나, 2개 차로를 시위대가 쓸 수 있도록 허용해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했다.

이날 전국 7대 도시에서 열린 FTA 반대 시위는 서울·전주를 제외하고, 광주 등 5개 도시에선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최금복(24·대학생)씨는 " 이번 금남로 집회가 '평화시위'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촛불을 동원해 FTA 반대 시위를 하니까 시민들도 호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이승철 광주공연
12월16일(토) 오후 7:30 광주염주체육관
광주일보사 (062)220-0541, 1544-1216